

과학기술정책과 국민합의

## “支持기반조성 위한 단계별 실천방안 시급”



金 學 銖

〈西江大교수·言論學〉

이 글에서는 펍 사사로운 필자의 최근 경험에서부터 이끌어 나가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사사로운 경험이 펍 敎示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미국커뮤니케이션학회 참석을 마치고 오는 길에 개인적인 욕심으로 일부 과학 연구소들의 대외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찾아간 곳중의 하나가 Ohio州 Cleveland 시에 자리잡고 있으며, 미항공우주국 소속의 가장 큰 3개 연구소중 하나인 The NASA Lewis Research Center였다. 필자는 그곳에서 우연히 독립투사 南宮櫛씨의 손자인 David Namkoong 씨를 소개받았고, 그는 그곳의 고참 엔지니어이므로 내가 만나거나 보고 싶은 일들을 자세히 주선했다.

그곳 커뮤니케이션담당 최고책임자의 가장 큰 주임무는 어떻게 하면 클리브랜드 시민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였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중의 하나는 “매주” 하나 정도의 시민을 위한 행사를 주최하고 그것을 언론에 알리는 일이었다.

예컨대, 우주에 관한 시민강좌를 연다든지,

전시회, 청소년 초청견학등의 행사들이 바로 그것들 이었다. 이것도 모자라 지금 있는 조그만 방문자센터를 없애고, 차후 2~3년내에 새로운 거대한 방문자센터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배경에 대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NASA는 미국의 대부분 연구소들과 운영면에서 크게 다르다. 미국의 많은 연구소들은 대부분 비영리 私設研究所들이다. 이것은 곧 개인적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모든 운영은 스스로 연구용역들을 확보하는 獨立採算制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사실상 大學의 研究所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非營利 私設研究所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한국과학기술원이 모델로 삼았던 Battelle Memorial Institute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용역 확보에 혈안이요, 따라서 對國民 커뮤니케이션활동을 활발히 해야됨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한국과학기술원이 거의 전적으로 재원을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

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부재는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반면에 미국의 NASA는 거의 모든 재원을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위에서 본 연구소들처럼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과거에는 없었다. 그런고로 소위 대통령의 의지나 선거공약에 훨씬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형태가 행정부 단독이 아니라 반드시 의회와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울러 미국의 경제가 낙후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하는 NASA의 예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NASA자체가 이제는 국민적 지지획득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는 의회지도자들에게 이해를 구할 길이 없고, 이것은 결국 예산확보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로부터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NASA가 전면적으로 직접 나서야 된다는 인식 전환이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클리브랜드市 NASA연구소의 경우 또다른 시민들의 저항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반핵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연구소에서 이용되고 있는 실험용 핵연료의 위험성을 이유로 연구소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것은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비공개적 경향에서 생긴 誤解일 가능성이 많음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그 연구소가 클리브랜드市 시민들을 위해서 창출하는 고용기회의 확대같은 것은 전혀 도외시하고, 위험여부에 대한 확인은 없이 폐쇄론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는 과학기술도 공개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아가 대 국민 커뮤니케이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위의 예는 과학기술 분야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대 국민 커뮤니케이션활동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NASA가 과거에 경험한 것과 비슷한 실정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겠다. 즉,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이 소수 엘리트집단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서도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여간 적은 투자자금으로 특수전문집단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한계에 도달되어 있다.

우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필요로 하고, 이것은 곧 國民的 支持가 없이는 충당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연구개발(R & D)비에 대한 투자만 1989년에 총 GNP의 2.6%, 2000년까지 5%를 목표로 한다고 할 때 그것이 간단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과학기술 文化에서 국가예산의 절대적 증액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에는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고, 의회의 지원은 곧 국민적 지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고리관계는 향후 야심적 과학기술 사회의 건설을 꿈꾸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대 국민 접촉에 나서야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과학기술사회가 부분적으로 만들어내는 역기능들이 점점 국민들의 직접적인 관심을 끄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공해, 생태계 파괴, 산업재해 등으로 생기는 국민적 우려도 과학기술분야가 긴급히 대처해야 할 사항들이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산업공장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위등이 따져보면 결국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심화시켜 주는

이 글은 한국 과학기자클럽이 주최한 「과학기술정책과 국민합의」 워크숍에서 발표된 것이다. ....(편집자註)

과정이다. 이런 일에 대한 대처는 사후에 관한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과학기술의 역기능들이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정책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제반사항들이 사회윤리성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나서도 사후의 역기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쉽게 국민적 양해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과학기술분야가 이제는 스스로 대 국민 접촉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 국면에 도달되어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조금 머리말이 길어졌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밑바탕으로 할 때, 과학기술정책과 국민합의의 연결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얼마나 긴요한지가 쉽게 명확해진다. 그러나 그들간의 연결 당위성만으로 그 연결을 원활하게 해줄 구체적 방안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보다 실질적인 方案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단히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순수이론적인 것만큼 가장 응용적인 것이 없다는 金言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접근시켜 보려고 한다.

### 국가와 국민의 기본 행위구조들

여기에서 말하는 과학기술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민합의는 국민들간의 합의를 가리킨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의 주도적 주체는 국가인 셈이고, 국민합의의 주체는 국민 개개인인 셈이다.

물론 전체국가를 대신하는 실질적 행위자는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민, 즉 정부와 국민 개인의 차이를 규명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정책과 국민합의의 합리적인 연결방안들을 찾을 길이 없다.

우선 국가는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국가는 개인들이 공통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조직화시킨 틀 안에서 전체가 하나의 주체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덩어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개인들간 조직화의 틀이 바로 규범, 도덕, 관습, 법률 등의 사회적 규정들이다.

이런 규정들은 한마디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해가는 데 필요한 개인들의 동원지침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국가는 하나의 살아있는 개체처럼 행위단계들을 밟아나간다. 물론 그 행위단계들의 전체적 목표는 어떤 특정 개인의 목표와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국가적 목표란 대부분 여러사람의 전체적 이익에 맞추어져 있지, 개인들간의 경쟁적 이익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위의 목표는 다를지라도 행위단계별 유형은 국가나 국민 개개인이나 같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집단성(Collectivity)과 개별성(individuality)의 차이이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행위단계들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위단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행위단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의 행위단계들을 알 수 있는 것 외에도 행위단계별 국가정책과 국민합의의 연결을 위한 가능성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의 행위단계들은 일반적으로 ①주목단계 ②생각유도단계 ③방향형성단계 ④방향결정단계 ⑤행동집행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인간의 행위는 바로 위의 다섯가지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진다.

주목은 순전히 외부의 대상에 지각적으로 접촉하는 행위이고, 생각유도는 주목된 대상을 의미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방향형성은 앞으로 대처해나갈 방향들을 수립하는 행위인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여러개의 방향들을 모색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곧 여러가지 가능한 목표들을 세우고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방향결정은 앞에서 세워진 여러개의 목표들 중 하나를 선택·결정하는 행위단계를 가리킨다.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한 행동집행으로 나아간다. 이 다섯단계가 인간의 기본적인 행위단계들이라 하겠다.

바로 위의 행위단계들이 국가나 정부가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주체가

누구이든간에 그 행위단계들의 기본형식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상 내용에서는 크게 다르다. 예컨대, 국가적 목표와 개인적 목표가 같기가 어렵다. 설사 비슷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크게 다를 수 있다.

예를들면, 국가나 정부의 입장에서 기초연구 투자가 가장 중요한 미래의 목표라면, 일상적인 개인의 목표는 지금 당장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일 수 있다. 이 경우에서 前者는 국가 전체적 공동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後者는 개인이 누리고 싶은 당장의 이익에 목표를 두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국가와 개인의 목표가 내용상에서 크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에 있어서 그들 兩者 목표들간의 우선순위가 단순히 다를 수도 있다. 즉, 국가의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목표는 기본적으로 차후에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주자는 것이고, 국민의 당장 복지혜택 목표추구는 기초연구에 투자해서 후에까지 기다릴 것이 없이 지금 당장 누리겠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곧 결국 여러가지 方向設定 중 그들

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국가와 개인이 다를 수 가리킨다.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들은 목표들이 아니다.

주목단계에서는 국가와 개인의 주목대상이 다를 수 있고, 생각유도단계에서 국가와 개인의 관심사들도 다를 수 있고, 행동집단유도단계에서 국가와 개인의 행동지침들이 서로 엇갈릴 가능성도 크다. 이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림-1>과 같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국가조직의 민주적 통치란 자연스럽게 국가와 개인간의 행위단계별 내용을 가급적 가깝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국가와 개인간의 다양한 만남들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국가와 국민간의 행위단계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행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단계별로 다른 내용이 존재하면 자연히 단계별로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행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가와 국민이 민주적으로 같은 길을 가고자 할 때에는 더더욱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지 않고는 공유된 영역을 확보할

### 永久保存의 미이라가 되려면

“당신은 당신의 몸을 영원히 보존하는데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미이라로 만들 수 있는 한 기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모두가 같은 장소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객석대신 일등석을 타고 비행하는 것이나 같다”고 미이라를 만드는 공법의 특허를 받은 세계 유일의 기업인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의 섬뎀사 사장 코키 라는 말하고 있다.

의사, 변호사 그리고 에어로빅강사를 포함하여 거의 1백명

에 이르는 사람들이 계약에 서명했다. 예컨대, 올해 40세의 캘리포니아주 트랙터 운전사인 론 제퍼러는 이 계약에 서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본래의 신체없이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제외하면 주소변경이나 다른 없는 것이다.”

라의 표현을 빌면 고대 이집트의 미이라 만들기는 ‘사람을 육포로 만드는 것’이었으나 섬뎀사의 전문가들은 시체를 수일간 포름알데히드와 페놀을 포함한 여러물질로 된 용액속

에 담긴 다음 장기는 제거하여 처리한 뒤 요구에 따라 다시 몸의 원 위치로 돌려 주거나 특제 항아리속에 보관한다.

이 시체는 약초와 향신료로 처리되고 폴리우레탄막으로 싸인넨으로 싸다. 이 모든 비용은 7천7백달러. 섬뎀사는 자체의 20세기 피라밋에서 장의식을 거행하고 대리석으로 된 성역내의 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1만8천달러를 과외로 내면 사람모양으로 만든 공기를 차단한 마춤관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두경을 용접하고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기 위해 아르곤가스로 훈증했다.

길이 없다. 그 공유된 영역이란 다름 아닌 국가와 국민이 지향하는 행위단계별 내용을 가급적 동일하게 일치시키려는 노력에서 산출된다. 물론 그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서로가, 특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먼저 주목단계에서는 주목의 대상들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평면적인 정보확산(diffusing)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같은 대상들을 향하여 함께 주목을 기울이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두번째로 생각유도단계에서 가능하고 필요한 커뮤니케이션행위는 논의(discussing)라 하겠다. 즉, 국가와 국민의 관심사들이 형성되고, 그들이 논의를 통하여 共有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주목대상에 관심을 쏟음으로써 국가나 개인이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시도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의미부여된 것들이 국가와 국민 서로간에 논의됨으로써 같은 관심사들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관심사들이 같지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국가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외쳐보았자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국민의 행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관심사들이 공유되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 대한 대처방향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삶을 영위하고, 특히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처방향들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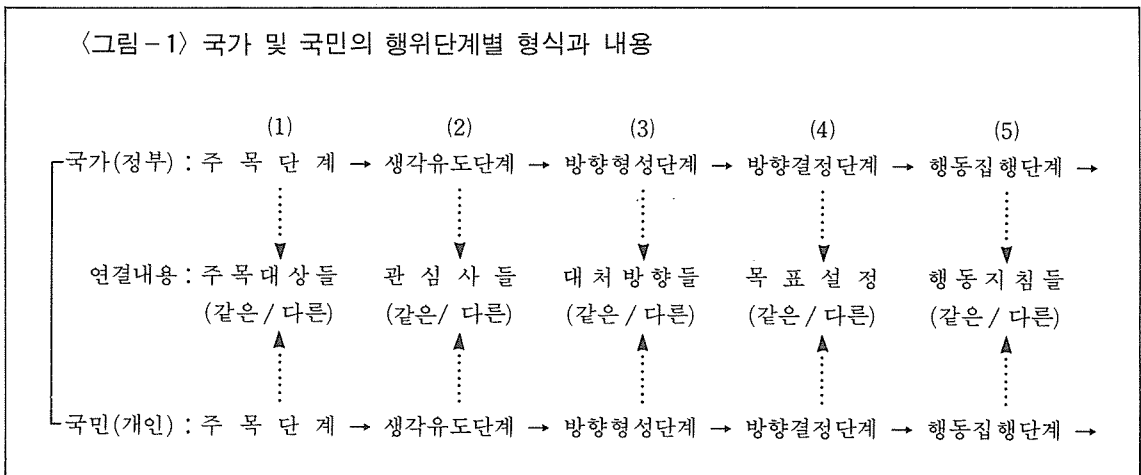
그리고 모색된 방향들이 서로 공유되도록 커뮤니케이션행동이 벌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의 각기 다른 대처방향들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바로 여기에서 소위 논의(debating)가 활발히 진행될 소지가 높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민간에 대처방향들의 공유를 위해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행위는 곧 토의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토의과정에서는 대처방향들의 모색이기 때문에 비교적 專門인 내용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행위가 활발해진다는 점이다. 이들 대처방향들이 서로 모색되고 나서는 물론 국가와 국민 모두 그들 방향들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최종 목표설정을 한개로 압축시켜야 한다.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완전히 서로 다른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성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행위의 방향은 하나(singular)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에서 한개의 행위목표를 위한 결정단계가 의미있게 된다.

국가와 국민이 하나의 공통목표를 결정하는 일이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논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반드시 국가와 국민간이 아니더라도 국가내에서도 논쟁적인 과정

(그림-1) 국가 및 국민의 행위단계별 형식과 내용



이 요구되어진다.

왜냐하면 한 목표로의 결정은 많은 가치적 관점들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적 국가운영이 아닐수록 충돌을 표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논쟁(arguing)을 피하고 특정인에 의해서恣意的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높다.

특히 논쟁에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그들이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논쟁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든간에 상호이해가 높아짐은 물론이고 바른 방향으로의 합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목표설정이 이루어진 방향결정단계가 지나서는 이제 결정된 사항을 국가나 국민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告知(informing)하는 커뮤니케이션활동이 요구되고, 그 단계가 바로 행동지침들을 알려서 직접 행동집행에 들어가는 단계이다.

사실 이 단계에 오면 이제는 결과만 기다리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련의 행위단계들이 일단락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논의한 행위단계별로 본 커뮤니케이션행위의 모든 유형은 <그림-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유형들 각각은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가 빠질 경우 결국 그 다음단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쳐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국가와 국민이 공동의 삶을 민주적이고도 공동체적으로 영위해나가기 위해서는 주목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들은 기본 행위구조들이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이든간에 관계없이 해당되며, 아울러 어떤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정책에 관해서도 국가 내지 정부와 국민간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그림과 똑같은 과정을 빠짐없이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정책과 국민합의간의 민주적 연결방안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행위단계별로 각기 다른 커뮤니케이션행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곧 의견들의 다양성이 전개되어 나오고, 그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合意 개념이 사실상에 있어서 매우 도달되기 어려운 목표를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호당사자간의 同意(agreement, consensus)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合意에 도달되기 위해서 여러 유형의 커뮤니케이션행위들을 거쳐야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느 한 방향으로의 목표설정이 국가와 국민간에서 처럼 관련당사자간에 완전 合意(consensus)에 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별 커뮤니케이션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合意(consensus) 도달의 어려움은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의 활발성을 가리키는 合議(public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되는 셈이다. 즉 合議가 合意의 前提조건으로서 더 크게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合議의 유형들이 곧 국가와 국민간의 정보확산(diffusing), 논의(discussing), 토의(debating), 논쟁(arguing) 및 고지(informing) 등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에 관련된 合議유형들을 우선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合意의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이 국민 合議의 제유형들을 거치면서 도출되고, 그런 과정에서 도달된 국민 合意에 기반을 둔 방향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 결국 과학기술정책과 국민합의가 가장 민주적으로 연결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에 관해서도 국가와 국민간에 존재하는 행위단계별 커뮤니케이션행위 유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국민 合議이며 아울러 合

의 기반까지 확보하는 셈이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행위단계별 각 커뮤니케이션행위 유형에 걸맞는 구체적 실천방안들을 살펴보는 것이 크게 중요하게 된다.

우선 주목단계에 존재하는 정보확산의 커뮤니케이션유형에 걸맞는 구체적 방안들은 견학활동, 산업시찰 및 각종 기념일행사 등이 있겠다. 즉 이들의 활동은 무관심한 사람들을 어떤 것으로 단순히 주목을 끌기 위한 방안들이다.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도 일단은 국민이 주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울러 될수록 많은 견학이나 시찰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주목대상을 과학기술영역으로 확대시켜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의 기관들이 일반인들을 위하여 문호를 크게 개방하고 호기심을 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과학기술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념일에 초대행사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넓게 견학하도록 오픈하우스를 베푸는 행위 등은 효과적인 정보확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관 확충이나 과학관련 전시회 개최 등도 바로 무관심 집단을 주목집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다.

물론 이런 활동들의 다변화가 우선 우리의 실정에서 급선무이지만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자유로운 개방만이라도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전문성이란 이름하에 그들 기관만큼 접근하기 힘들고 폐쇄적인 사회적 기관들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정보확산 활동들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성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연구검토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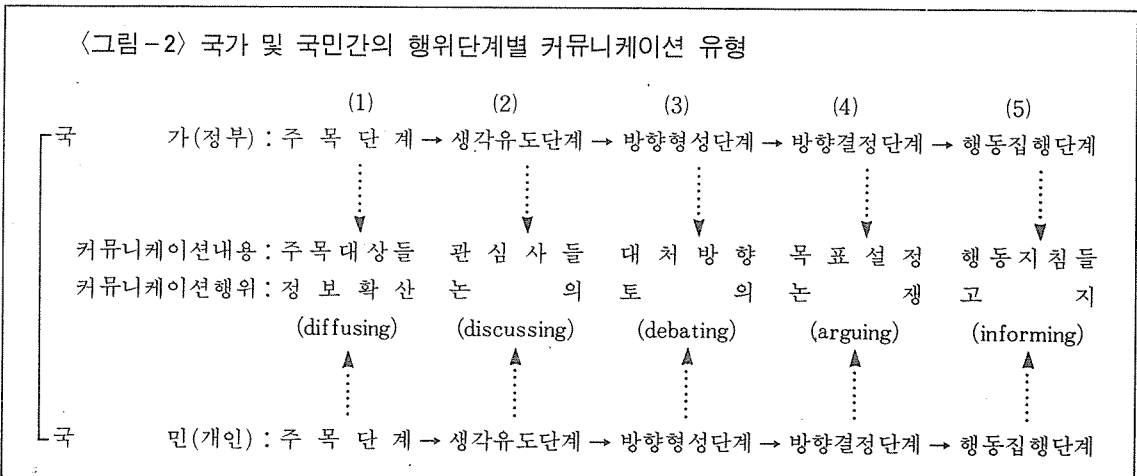
주목단계에서 이루어진 정보확산을 통하여, 이제는 관심사들이 형성되고 논의되는 소위 생각유도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것에는 교양강좌 내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즉, 주목이 확대되어 관심의 영역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해설이나 설명을 해주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것들이 바로 교양강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일들이다.

물론 정보확산 행위와 논의의 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도 일단 주목을 끄는 행사 다음에는 그것에 대하여 관심사들이 형성되도록 각종 강좌나 해설행사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기관들이 관련분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시민강좌 등을 개설해서 논의의 광장을 마련해주는 일은 평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믿어진다.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

〈그림-2〉 국가 및 국민간의 행위단계별 커뮤니케이션 유형



업체를 비롯한 모든 과학기술관련 기관들에게 평소 애행해지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助淸을 해 줄 수 있는 기본골격에 대한 연구작업이 필요 하다 하겠다.

관심사들이 형성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처방향들을 모색하는 방향형성단계가 따라온다. 이 방향형성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가벼운 논의와는 달리 꽤 심도깊은 내용들에 대한 討議가 본격적으로 벌어진다. 그러므로 토의의 과정에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행해진다.

그리고 그래야만 비로소 여러가지 대처방향들에 대한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토의단계의 구체적 실천방안들에 속하는 것들은 전문가 토론회, 세미나 및 심포지움개최 등이라 하겠다. 즉 이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활발한 토의를 거쳐 방향들을 모색한다고 하겠다.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런 행사들을 폭넓게 개최하여 관련부문과 당사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수행안되면 결국 특정집단의 이익에만 편중되는 정책을 낳기 쉽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토의 요구가 더 강렬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네번째 단계는 토의에서 모아진 방향들에 대하여 어느 하나로 결정을 내리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앞의 토의에서보다 훨씬 불꽃튀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즉 방향결정 단계에서는 관련 이해집단들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심한 論爭의 커뮤니케이션이 행해진다.

그리고 사실 그런 논쟁이 있어야만 비로소 관련문제들이 용해되어 하나의 목표설정엔 민주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런 민주적 논쟁의 구체적 방안들이 바로 公聽會 내지 聽聞會 개최 등이다.

사실 과학기술정책에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

가가 이런 논쟁장마련에도 소홀했지만 앞으로 민주적 국민 合議·意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 행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단 정부나 의회의 활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과학기술 관련 기관에서도 자신의 분야와 관련하여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널리 이용되어야 할 방안들이라 하겠다.

앞으로 이런 논쟁장 마련에 대한 소홀은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뒤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 이상으로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그것이 바로 민주사회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임에는 물론 말할 나위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향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행동지침들이 告知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동집행단계에서의 告知라는 커뮤니케이션유형이다. 이들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告知내지 大衆媒體를 이용한 發表 등이 있다.

사실 이들 방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동안 너무 많이 국가가 수행하여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왔지, 그 이전에 존재하는 단계들의 커뮤니케이션 실천방안들에 소홀해 왔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직한 표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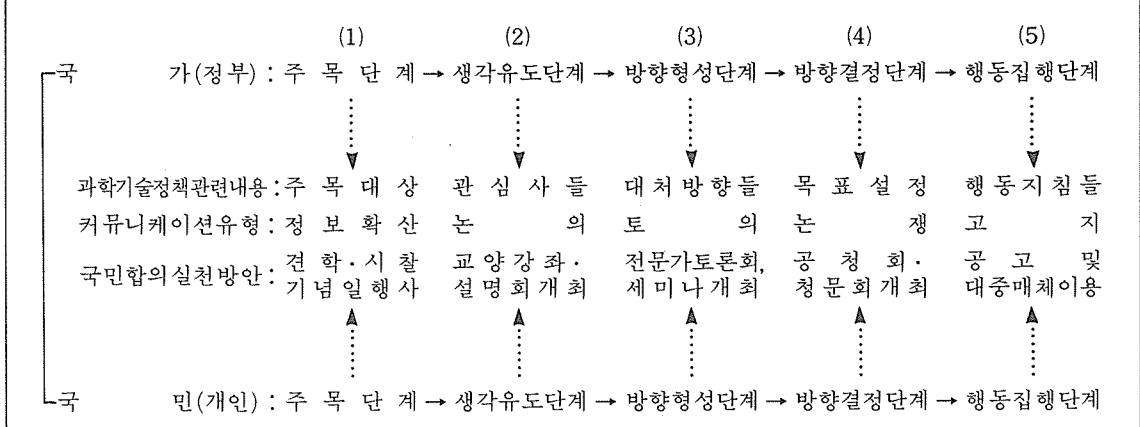
지금까지 보아온 행위단계별 커뮤니케이션유형과 구체적 실천방안들을 요약하면 <그림-3>과 같다. 이들중 어느 한 단계의 방안도 소홀히 할 때 과학기술정책과 국민합의는 민주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것과는 다른 많은 긴요한 示唆點과 段階別 추진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음을 요약된 <그림-3>은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다.

### 맺 음 말

이제 국가와 국민의 기본 행위구조들도 보았고, 아울러 행위단계별 커뮤니케이션유형들도



〈그림-3〉 국가 및 국민간의 행위단계별 과학기술정책 국민합의(合議·合意) 실천방안



살펴보았다. 아울러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국민합의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들도 단계별로 고찰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의 시행에서 특별히 명심해야 할 점들을 몇가지 언급해 보려고 한다.

첫째로 행위단계별로 제시된 방안들의 順序를 잊지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전반부에 필요한 방안들을 무시하고서 후반부의 방안들만 시도하는 행위 등은 국민합의의 도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방법이 주로 후반부의 마지막 告知행위만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이 국민합의과정과는 멀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과학기술분야도 국민의 폭넓은 지지없이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행위단계의 전반부들에 필요한 실천방안들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두번째로 행위단계별로 필요한 실천방안들을 총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그 기반위에서 또한 방안들이 범국가적으로 시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과학기술관련 기관들의 개방화에서도 어느 특정 기관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산업체를 비롯한 전국의 과학관련 기관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아울러 행사나 강좌등의 개최가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체계위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곧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국민합의를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으로 도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간의 상호연계활동을 하고 있는 言論人の 입장에서도 각 행위단계별로 필요한 취재와 전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단계별로 적절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방향결정단계의 論爭的 내용이 단순히 주목단계의 情報擴散式 보도유형으로 전달되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논쟁적 내용이 제대로 보도되기 위해서는 여러개 입장을 公正하고도 解說的으로 記事化하여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미국의 NASA가 겪었던 국민지지의 약화로 생긴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과학기술활동의 비공개로 생긴 국민적 저항을 우리도 겪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예상컨대, 급격히 민주사회로 옮겨가는 우리의 실정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얼마되지 않아 곧 겪게 될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설사 어려움들이 나타나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실천방안들에 지금부터 뛰어들어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범국가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이것이 이 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제언적 결론이다.